

환경자치시대와 여성의 역할

환경자치시대 91-5-24
90.7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I. 들어가는 말

금년은 오는 6월 23일~27일까지 유엔환경특별총회를 앞두고 있고 6월 5일에는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25주년과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의 5주년을 기념하는 제25회 세계환경의날 국제행사가 우리 나라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 의의 있는 해이다. 이번 기회가 국제사회에게는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우리에게서는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시민사회뿐만이 아닌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환경인의 바람이다.

제25회 세계환경의날을 기해 <환경자치시대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유엔 제4차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소개한 바 있는 생활협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무공해식품의 직거래 운동과 근래에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음식물생쓰레기 퇴비화운동 등 지역사회의 밑바닥 조직을 통한 실천운동에 주력하고 있어 모범적인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금번 심포지엄에서 우리 나라의 여성환경운동가들이 전세계 여성들이 일구어 온 환경운동의 내용을 공유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동향을 그려보며,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환경운동을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그 역할과 대안적 활동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 주최측은 주제에 따른 기초발제의 내용을 ①여성과 환경문제의 주요 논점인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해 여성은 어떤 특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②여성과 환경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으로서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여성환경운동의 방향, ③북경대회 이후 여성환경 운동에 대한 평가, ④<지방의제 21>과 여성, ⑤환경자치시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제도적 보완 등으로 하고 있다.

이제 개막된 지 2년도 채 안되고 있는 환경자치시대=주민자치시대에서 지역사회환경행정에 어떻게 주민이 동반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극히 부분적인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발제자가 여성과 환경관련 쟁점을 비롯한 환경운동의 국제적인 동향분석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정리해 낸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자료, 그리고 관심의 초점의 차이 등의 한계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라기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나라에 여성환경인들이 베이징이후에 한국여성환경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길잡이가 되는 화두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II. 리우+5와 베이징 이후의 여성환경운동(WEDO)

지난 3월 13일에서 19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산하 지구위원회 주관으로 '92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5년간의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의 이행사항을 평가

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리우+5포럼>이라는 지구적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토론회는 세계정상들이 리우회의 후속조치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환경특별총회를 위한 준비모임의 하나이다.

그리고 세계여성환경운동의 연합체인 여성,환경,지속가능한개발기구(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 - WEDO)는 베이징 이후의 <여성행동계획 21>과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한편 <리우+5포럼>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와 유엔환경특별총회에 지속가능한지구를 위한 여성들의 시각과 경험,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환경자치시대에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서 오늘의 지구환경개선 노력의 실체를 짚어보며 국제적인 논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두 기구가 내놓은 자료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관심 하는 바는 세계각국 정상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개발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 5년동안 지구의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92년 리우회의 당시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이후 20년간에 지구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성장의 한계> 후속편인 <한계 이후>의 보고를 접하고 세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창한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 5년간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기관 설치 또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96년말 현재 64개국의 1412개 자치단체들이 작성 완료 또는 작성 중이라는 등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더욱 악화되어간다는 평가이다.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의 97년 지구환경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은 실패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리우회의 이후 세계인구는 4억 5천만 명이 늘었고, 지구온실효과를 부추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치솟았지만, 숲은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벌목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리우+5 포럼>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①100여개 국가의 국민들은 15년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고, 13억 인구는 하루 소득이 1불도 되지 않는다. ②세계인구중 가장 부유한 20%와 가장 빈곤한 20%간의 소득격차는 지난 30년 동안 30배에서 60배로 확대되었다. ③15억 인구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며, 10억 인구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20억 인구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④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80%는 10여 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⑤개발도상국의 외채는 계속 늘어 2조 1천억 불에 달한다. ⑥세계인구의 25%가 채 안되는 선진국 국민들이 자원의 75%를 소비하고 쓰레기의 75%를 배출한다(우리 나라 '92부터 20%의 다소비국가로 분류-월드워치연구소).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30배나 더 지구환경에 부담을 준다.

매년 610만 ha의 온대림과 460만 ha의 열대림이 사라지고 매일 150~200종의 생물이 멸종되며, 세계 15대 어업국가운데 13개국가의 어획고가 감소하고, 미국, 인도, 중국, 남부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중앙일보 '97-3-10 강창수).

92년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논쟁을 하며 세계의 언론매체가 일제히 환경 문제를 대서특필하고 있던 리우회의기간인 12일간에도 반환경적인 현상이 계속되었다. 3백만명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168만대의 차량이 새로 출고되었고 2,160평방 마일의 산림이 사라지고 14만 4천배럴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으며 4억 5천 6백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되었다. 또한 6억 7천 2백만 톤의 탄산가스와 1만 8천 톤의 염화불화탄소가 대기권에 방출되었고 최소한 31만 2천명의 어린이가 기아 등으로 죽어갔는데 같은 기간에 지출된 군사비는 3천억불이었다는 것이다. (지구정상회의, 아담 로저스 1993) 이러한 현상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도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어 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은 국제정치·경제·사회 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과 <각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지속개발위원회 제5차 고위급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한 환경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남북간의 문제, 대개도국 환경기술과 재정지원문제 등에 대해 5년전의 교착상태에서 한치의 개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수밖에 없는 실정은 유엔환경기구(UNEP)의 사무총장인 모스타파 툴바가 “브라질 회의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가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그 회의의 논의에서조차 지구환경위기극복의 핵심의제들이 강자의 논리에 의해 배제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 핵심의제들은 ①다국적기업문제 ②인구와 식량문제 ③군사문제 및 핵사용 문제 ④<의제 21>의 합의사항 실효성 확보문제(목표년도 설정, 재원) ⑤리우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문제 ⑥지구온난화와 연계된 화석연료사용문제 ⑦발전도상국의 외채문제 ⑧자유무역문제 ⑨경제불균형문제 ⑩민간단체(WEDO의 <여성행동계획 21>도 포함)의 의견수렴문제 등이다.

남북간 또는 국가간의 특히 선진국과 강자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것이 지구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정치의 교착된 현상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여성들로 구성된 WEDO가 리우회의에 앞서 91년 개최한 제1차 마이애미 여성환경회의에서 작성한 <여성행동계획 21>에는 배제된 모든 의제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베이징회의에서 배포된 WEDO의 자료에 의하면 WEDO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여성들이 지구환경보전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남성 또는 강자와는 달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여성들 간에도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다.

지구환경훼손의 주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문제는 그들의 로비에 의해 <리우선언>이나 <의제 21>의 내용에 어떤 형태로나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던 문제였다. 그때 당시 NGO포럼에서 합의된 대체협약과 마이애미의 <여성행동계획 21>에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국가수반으로 구성된 지구정상회의는 회의의 재정후원을 하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 결과 리우회의는 지구환경을 위하기보다 경제, 외교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문제를 세계여성환경인들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자부할만하다. WEDO가 앞으로 계속 지구정상회의에서 배제된 군사문제, 소비태도문제, 핵문제, 개도국의 외채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루기를 기대해본다.

여성환경인들로 구성이 된 WEDO가 지구환경문제해결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겨지는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여성환경운동이 지니고 있는 강점일 것이다. WEDO는 국가제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민간기구라는데서 힘의 발휘가 가능하다. 오늘의 지구환경정치의 교착점을 풀어내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민간기구의 힘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에 얽매임 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은 가부장제 하에서의 약자의 억눌림의 경험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약자에 대한 연민, 생명의 담지자로서의 생명에 대한 강한 경외심 등)를 지니고 있는 인간군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은 생명을 중시하는 모성의 원리를 무시한 가부장적 개발이 가져오는 자연환경파괴와 여성에게 주는 피해를 막는 변화의 원동력도 여성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¹⁰²³개발을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여성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남쪽(제3세계)에서는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적 그리고 성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한 빈민층의 생계위협과 생명위협의 직면을 문제시하고 있는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개발(WED)을 그리고 북쪽(제1세계)에서는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대안이면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탄생하게 하였다.

이 두 흐름의 주장들이 개발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여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되었다. 여성들은 환경과 개발논리에 여성들이 자기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를 통해 기여하는 것이 현재의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 성이 환경과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모든 사회집단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회복에 있어서 여성이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여성만이 가능하다는 등의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었다(하더웨이 1991)”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찍이 흑인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주장되어왔던 것이다.

여성과 양심세력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의 의견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리우회의 의제 21에서 여성행동계획21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을 비롯한) WEDO가 베이징회의이후의 자체평가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성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와 권리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례는 모범이 되어야 할 유엔기구에서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크다. (여성권리 4개 대항으로, 3개의 인권권 상임여부결정)

WEDO는 <리우+5>와 유엔환경특별총회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적인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에 들어갔다. 그 평가의 항목을 보면 ①무역과 세계화 ②식품의 안전성 ③건강과 의료 ④여성의 행정 및 정치 참여 ⑤군사주의와 폭력 ⑥에너지, 교통과 도시화 ⑦환경정의와 법 ⑧생물다양성, 생물학적기술과 지적재산권 ⑨과학과 기술 ⑩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문제이다. (각 국가들에게 '96. 12까지 보고서 제출하도록 통보)

특히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는 리우의 합의사항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진척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한편 90년대에 개최된 유엔의 주요회의들인 ①인권문제(비엔나) ②인구문제(카이로) ③빈곤과 사회발전(코펜하겐) ④여성(베이징) ⑤인간정주권 - 도시화(이스탄불) 등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어있어서 WEDO는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자성 필요)

WEDO는 또한 '96년 9월 5~8일에 워싱턴 D. C.에서 개최된 매 2년마다의 여성발전회의에서 <베이징 이후의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96 토론회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오늘의 여성문제, 환경문제, 경제정의, 평화문제 등에 대한 진척사항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종합 평가하여 해당국제기구와 각 국가정부들에게 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베이징 이후의 국가보고서(정무부작성 WEDO에 제출)에 의하면 베이징 이후 우리 정부는 ①즉각 기자회견 개최 및 국가에 회의결과 보고 ②후속조치를 위한 기구구성 ③여성발전특별법 제정(1995. 12) ④정무 부서의 인적, 재정적 확충 ⑤여성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에 힘쓴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민간여성환경운동연합기구로서는 베이징 여성대회에 앞서 95년 2월 15일 10개의 환경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여성과환경, 지속개발에 관한 한국 NGO 네트워크>가 있다. 이 기구는 현재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여성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 NGO 네트워크의 베이징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세아지역 여성대회를 주최한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WEDO나 여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여성의 목소리를 국제여론에 전달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III.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운동

지난 4월 6일로부터 1000일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21세기는 경제의 세기였던 21세기와는 달리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환경의 세기이다. 세계는 21세기를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 그리고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고 있으며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③정부와 주민간의 관계가 수직적이었던 것에서 수평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21세기의 삶은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한 질의 문제이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89.8%와 전문가 95.3%(한국환경기술개발원, '96.3)가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나라의 국정목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하게 되어있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제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3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이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자율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동반자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의 터전인 공동체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백척간두에 선 경제, 정치, 사회, 교육, 환경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극복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하고 있다. 오늘처럼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없었다.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유일한 대안이 바로 시민운동이라고 식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시민사회의 저해요인 또한 엄청나게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현재 시민의 권리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제한다면 엄청난 수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NGO라고 불리고 있는 민간운동은 이미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주적 시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한 문제로 경실련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로 시민단체들은 제각각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오늘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사회가 바라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권위(정당성과 신뢰성)와 힘(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3월 24일자 한국일보의 <시민단체의 자기 개혁>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보면 80년대 후반 기존사회운동의 명백한 한계 속에서 제도정치권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시민단체들은 90년대 초반 한 때 우리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소수의견, 반대의견을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시민단체들의 입지확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시민단체의 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형상의 덩치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위상은 반대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위상제고는 시민단체들의 자기개혁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우선 과제로서 ①대중성의 제고 ②내부문제(재정확보, 양질의 인력 충원 및 유지)의 해결 ③조직과 구성원의 도덕성 견지 ④민주적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최근의 환경운동·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유급 실무자에 의한 엘리트 중심의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해 운동체의 의사결정과 운동전개과정의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시민이 없는 시민운동은 많은 수의 실무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에 따른 막대한 경상비 지출 문제로 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자기 유지를 위한 하나의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자성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의 시민운동·사회운동이 소수의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 소수 명망가들이 모든 시민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운동이란 파급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과성 행사로 이어지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시민운동에는 많은 시민이 가담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쳐 시민에 의한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신뢰성 문제가 심판의 자리에 오른 차제에 시민운동은 반성을 거쳐 자기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전 YMCA연맹 사무총장인 강문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운동의 체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한다.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도덕성·신뢰성 확보, 회원에 의한 재정충당방안 마련, 전문인력확보 등으로 시민운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행정력을 보완하며 거대화되어 가는 경제권의 횡포에서 시민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21세기는 시민사회의 세기이다.

IV. 환경자치시대와 <지방의제 21>

오는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날 국제행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뒤늦은 감이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기회에 선포하기 위해 <지방의제 21> 수립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나라의 자치체들도 지구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하게 되거나 하나의 문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지방의제 21>은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이며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실천을 위한 약정서이며 행동지침서이다. <유엔 의제 21>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지구시민 개개인과 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방정부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행정은 지역단위가 작을수록 그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27 사대지방자치선거의 의의는 크다. 지방자치시대=주민자치시대=환경자치시대의 공식의 성립은 지방자치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곳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을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드는 <환경공동체 건설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운동의 청사진이 바로 <지방의제 21>이다.

<지방의제 21> 수립은 그 계획단계와 실천추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필히 지방정부, 지역사회기업, 그리고 주민과 민간단체 및 기구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총동원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은 행정예의 주민참여의 틀이 된다.

환경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환경문제는 국가정상들의 합의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핵무기 감축문제와는 달리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정책집행은 특히 인력과 재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환경행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행정예의 주민의 참여는 환경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따르게 마련인 분쟁해결에도 좋은 해법이 되기도 해서 좋은 정책이다.

행정예의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환경공동체)로 만드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물질적이며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중심의 사회체제속에서 지역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잃었으며 지역적인 삶의 문화의 토대를 붕괴시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시켰

다.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무명성, 소속감 부족, 고향의식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공동체사회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비결로 세계의 다른 도시들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행정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환경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체에 따라서는 행정 부서에 민간기구(서울시가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를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에의 민간참여의 문호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다고 시도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지방자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시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자치행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동등 협력적인 행정참여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행정에 필요한 새로운 틀, 그것도 3자의 공동노력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여성이 앞장서서?)

행정에의 실질적인 지역주민참여는 새로운 시도로서 관주도의 행정관행에 젖어있는 관료에게 있어서나 행정에 관한 한 수혜자, 통치 및 관리대상에 머물러있는 주민에게 있어서 생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치시대(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 환경을 지키는)에서의 주민참여문제는 정착시켜야 한다.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행정관례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자치시대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환경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들이 그들 상호간의 협동심과 인내심으로 이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환경자치시대에서의 <지방의제 21>의 중요성은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총동원되어서 협력하는 가운데 살맛 나는 내 고향과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데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V. 지속가능한 사회와 여성의 역할

<유엔 의제 21>의 제24장의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발전을 향한 여성의 행동계획>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가의 여성들이 빈곤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낮은 지위로 인한 차별대우 그리고 발전계획에 여성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자원관리와 소비생활에 있어서 주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세계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교육과 의식개발이 잘된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성의 차별철폐와 지위향상 그리고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 개인소견으로는 여성을 행동계획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교육정도, 의식개발- 제시 등은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는 참여시켜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사회의 원칙에 부합되며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의 수립 및 실천에서의 9개의 행위주체 (9 major groups)에 여성이 일원임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자치행정=환경자치행정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은 중요하다. 여성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성운동은 시민운동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여성(시민사회)은 '동등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
취약계층이
개발
스스로 up
grade 할
것인 시민
행위를 통해
환경제권
필요

지속 가능한 사회(순환사회, 환경자치공동체) 건설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도 그렇지만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미루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세계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 환경보전의 과제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여성의 일부에서 생활속의 실천운동(환경보전운동)이 가정내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이론가중에도 화폐로 보상되지 않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해낸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균형과 여성의 빈곤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판하는 견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쟁은 지구환경문제와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과 심각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생겨진 것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현존하는 기득권자들의 기성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데서 생긴 발상이 아닌지 한번쯤 질문해보아야 한다. (깊은 논쟁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어렵지만 필수적인 사안에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누가 수고를 하는가 그들에게 공이 돌아가야 한다.

만일에 여성들이 자기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가 수고해야 하는 생활 속의 실천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할 뿐 지구환경보전과제 앞에서 국가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지구환경보전은 인간중심에서, 성중심에서, 지역중심에서, 분야별 중심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지구환경은 인간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정} 물론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장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성은 지금까지의 남성과 관 주도의 가부장적 악재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죽음의 문화를 지속 가능한 발전추진으로 여성과 민 주도의 생명의 문화로의 전환을 성취할 대안세력(역사의 대안)이다. 여성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오늘의 현실에서 남성보다 지역사회를 보다 잘 아는 지역사회의 주인이며 지역행정의 주역이다. 여성의 잠재력은 아직 써보지 않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기대해 볼만하다. 오늘날 여성들이 사회운영의 대상자 → 요구자 → 저항자 → 동반자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향해 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성은 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환경파괴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감시자이다. ①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생활)양식(에너지, 물,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을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 ②피해자로서는 쾌적한 지역 만들기(동리청결, 녹화, 하천살리기, 공원, 문화재 등의 실명제 관리)에 앞장선다 ③감시자로서는 지역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기업, 정부 상호간의 감시활동을 한다.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1인3역을 할 수 있도록 여성운동체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①경제주체(소비자/생산자) ②교육자/양육자 ③지역주민 ④전문가/의사결정자 등으로 구분해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적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제모색은 향후 계속되는 이론연구와 실천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베이징 이후의 한국여성환경운동의 과제로서 발제자는 '95년도 가을에 이미 어떤 글에서 제기한바 있는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하나는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문제이며 지구인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감안해서 베이징 회의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과 개발관련 국제기구들과의 연대를 보다 강화하는 일로서 WEDO에 가입하는 일이다. 이유는 WEDO는 유엔의 자문기구로서 대유엔 또는 대국제회의의 여성의 발언의 창구이기도 하고 한국 여성환경인들이 국제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WEDO의 가입은 <여성과 환경 네트워크>의 현상태대로 하는 수도 있지만 농촌운동, 소비자운동, 생협운동등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환경운동은 폐기물문제, 수질문제, 생활양식, 에너지문제, 생태계보전, 녹화사업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환경운동을 개념적인 운동차원에서 실천을 통해 사회개혁을 이룩하는 생동감 넘치는 운동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 나라 환경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얻어진 경험과 성과가 바로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심각해진 우리 나라의 지역환경문제를 바로잡기위해 주민의 지역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자기 고장을 생태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권역적으로 계획하고, 선 자리에서 행동하라"라는 지구보전표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그밖의 과제로서 ①행정기구의 민간기구 설치 및 참가 ②환경자치에 따른 제도개혁작업 ③여성환경운동은 지역기반조직운동으로 ④실천운동은 소집단활동으로 ⑤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⑥환경교육은 실천방안을 통해 ⑦<한국 여성의제 21> 수립 및 실천 ⑧국제네트워크 강화 등을 한국 여성운동계에 제안한다.

VI. 맺는 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크고 작은 회의가 국내외적으로 개최되는가 하면 수많은 협약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지구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국내의 환경문제는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을 자임하는가 하면 화려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수질, 대기, 생태계, 오염파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높은 국민의 환경의식이 실천과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시민, 지역사회 주민의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환경자치시대의 여성의 역할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다해져야 한다. WEDO의 <베이징 이후의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라는 주제설정은 이유가 있다.